

검증 공방 대신 정국 핵 급부상

靑 “李 ‘정치공작’ 사과 안하면 법적 조치” 우리 “BBK 국조 요구”...한 “후보 흡집내기”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 공방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으로까지 확산하면서 대선정국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전 시장 측의 ‘청와대 정치공작설’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이라며 “오늘 안에 이 후보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당 지도부-국회의원-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 전 대표나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한 김혁규 의원 측의 검증불 의원(우리당)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 전 시장이 자주 주소를 바꿨는데 사장이 월세라도 살았다는 말이나”면서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은 박 전 대표를 겨냥, “정수장학회가 지난해 2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박 전 대표의 연봉이 2억5천만원이다. 장학재단이 장학금의 10%를 이시장 연봉으로 지급했다면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급여가 실제 장학회 활동에 얼마나 쓰였는지 공개하고 소속세 납부내역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날 이 전 시장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BBK 추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은 이날 제출한 국정 요구서에서 “대선주자 검증 공방 등을 통해 이 전 시장이 횡령 및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사자가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조희에서 “여러 세력이 한나라당 집권을 막으려 하고 있고, 저를 죽이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갖고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광근 캠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을 죽인 후 정권연장에 필요한 맞춤형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집권세력의 어버한 공작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김재원 대변인은 “범여권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모두 한나라당 후보를 흡집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범여권의 행태는 흑색선전과 공작정치”라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4일 오전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北·美,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DJ,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학술회의서 밝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국내외 학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미국은 북한측에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외교 정상화라는 보따리를 쥐어 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2·13 합의로 원하는 걸 얻게 돼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됐고 합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현 국을 해쳐갈 수 없다”며 “북한측에서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언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줄 것만 주면 북한도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고 부시 대통령은 내 의견에 동의해 북측과 대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천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실험이 있었을 때 ‘모든 게 파국이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나는 단념하지 않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다”며 “미국이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외교 정상화를 해주면 북한은 비핵화를 해줘야 한다고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내의 수십 개 언론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부시 대통령도 마음이 바뀌었다”며 “미국은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경제제재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6차 회담이 긍정적으로 풀려가고 있고 2·13 합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자들 앞에서 논어를 논했다. 실제로 간여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해왔다”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웃음을 터뜨린 뒤 “좋은 지식인들의 모임을 앞두고 6차 회담을 가로막고 있던 마카오 방콕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려 큰 축복이 된 것 같다”며 말을 마쳤다.

학술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오스트리아, 인도, 호주 등에서 20여 명의 국제학자들이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부동산 투기 의혹

옥천땅·양재동 건물 ‘명의신탁’

후측 “법적·정치적 문제 없어”

또 이 전 시장은 지난 1994년 서울 양재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말형인 상은씨와 처남 김씨가 공동 설립한 자동차부품업체 대부기공(현 다스)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기공은 최근 투자운용사인 BBK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이 실제 소유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업체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옥천 양재동의 경우 소유권이 전 시장인 1982년 당시에는 이 전 시장이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이어서 아무런 법적·정치적·재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구태여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저당 설정과 관련, “통상 명의신탁을 할 때는 실질소유자가 채권자로,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각각 설정하고 시가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해당 양재동은 등기부등본상 이 전 시장이 채무자로 돼 있고 시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 설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영남대 전신 청구대학 이사장이었던 전기수씨의 4남 재용(성형외과 의사)씨가 14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신의 병원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영남대 이사장 및 이사 시절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영남대 이사장 시절 비리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전 청구대 이사장 아들 전재용씨

영남대 전신 청구대학의 이사장이었던 전기수씨의 4남 재용(성형외과 의사)씨는 14일 서울 논현동 자신의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영남대 이사장 및 이사 시절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 씨가 주장한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88년 영남대 국정감사 당시 밝혀진 내용으로, 전 씨는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키로 했다.

전 씨는 “박 전 대표가 지난 80년

29살의 나이에 오로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구대와 청구대 강제통합(68년)으로 탄생한 영남대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온갖 비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친인척들을 오직에 얽혀 재단과 대학을 사기업화했다”면서 “영남대를 좌지우지했던 측근 4인방이 앞장서 재단소유 부동산 34건, 처분, 불법자금 편취, 공금횡령, 부정입학, 공사대금 유용, 회계장부 조작, 판공비 사적용도 사용 등 사학재단의 전형적 비리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 캠프 2차 인선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 캠프가 14일 2차 선거대책본부 인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그 동안 친이(親李·친 이명박)계로 알려졌던 송영선 의원이 안보통일정책담당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또 1차 인선대 김기춘 의원이 맡았던 경남 선대위원장 안홍준 의원으로 교체됐고, 대 전선대위원장은 이양희 전 의원, 광 주선대위원장은 김정영 광주 동구 당협위원장 등이 추가로 임명됐다.

이환의 당 국책직무위원장은 호남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신용수 단국대 교수는 부위원장을 각각 맡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추행’ 최연희의원 선고유예

벌금 500만원... 판결 확정판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송자리에서 신문사 여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2·무소속)에게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응시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처벌조

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기타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과 비교했을 때 무죄 선고와 다를 없다”면서 “사법부가 성추행이 경미한 범죄에 불과하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람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람공채 모집안내
사람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직원채용 (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062)511-6359
H.P.017-631-4467
서울지원 TEL.02)3664-5263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